

기호 5

공약순위 1 :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

- 목표
 -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
 - 기본소득 목적세(탄소세/토지세)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
- 이행 방법
 - 전국민 기본소득 시행
 -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
 - 지식공유부에 대한 목적세로 시민세 도입, 비과세/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마련
 - 기본소득 목적세(토지세/탄소세) 도입을 통한 교정 효과와 세수 확보
- 이행 기간
 - 2022년 준비 거쳐 2023년 월 40만원 시작으로 2026년 월 65만 원 지급
- 재원조달방안 등
 - 교정조세형 목적세(토지세/탄소세) 도입
 - 토지세 도입
 -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, 모든 민간보유 토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인 0.8%~1.5%, 법인 0.5%~1.3%의 3단계 누진세율로 토지세 부과
 - 2023년 37.5조 원에서, 2026년 44.2조 원의 토지세 세수 확보
 - 탄소세 도입
 - 화석연료 에너지 전체에 대해 2023년 1이산화탄소환산톤(tCO₂eq.) 당 6만 원
 - 부과,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율을 2030년까지 점진적 인상
 - 2023년 42조 원에서, 2026년 53.6조 원의 탄소세 세수 확보
 - 지식공유부 기반 시민세 도입

- 모든 소득 원천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기여로 형성된 지식이 상당한 기여
 - 양도소득세 제외한 가계의 모든 법적 소득과 2021년 과세대상 상속증여가액에 대해 10% 단일세로 시민세 도입
 - 2023년 시민세 세수는 66조 원, 2026년 146.6조 원 추산
- 비과세/감면제도 정비
 - 비과세/감면제도 중 소득 보전의 성격이 있거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제감면의 정비 개혁
 - 소득세 감면제도 정비,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통합, 기타 세제 개혁
 - 2023년 91.5조 원, 2026년 113.8조 원 추계
 - 공공부조 수당 등 현금 복지를 기본소득에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
-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
 - 기본소득 지급액을 과세소득화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높임
 - 세수는 기본소득 월 40만원 지급하는 2023년 20.1조원, 월 65만원 지급하는 2026년 42.1조원으로 추계
- 기존 현금복지급여의 조정
 -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기존의 현금복지의 일부를 기본소득에 통합함
 - 아동수당,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제반 일자리 보조금 성격 급여는 2023년 폐지
 - 생계급여는 무소득 1인 가구 기준 2023년에 35만원, 2026년 28만원으로 감소 지급 이후 단계적 폐지, 기초연금은 2023년 20만원, 2026년 15만원으로 축소 지급후 이후 단계적 폐지
 - 기존 현금복지급여 조정에 의한 재원 절감분은 2023년 33.2조원, 2026년 44.4조원으로 추계

공약순위 2 :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

- 목표
 -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및 가격의 하향 안정화
 - 부동산 지대경제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의 전환
 -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

- 이행 방법
 -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
 - 현행 종합부동산세 폐지,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세 부과, 토지세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지급
 - 공공환매 조건부 토지임대부 개발
 - 공공개발 시행 시 주택 및 산업/상업단지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
 - 토지주택은행의 설립
 - 현행 토지비축제도를 토지주택은행제도로 개선. 토지에 대한 매입/매각 등을 통해 공공개발 사업과, 부동산시장 안정 목표
 - 주거복지의 강화
 - 10년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15% 달성 목표
 -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 확대
 -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인하
 - 최저주거기준을 현행 유도주거기준(국토교통부)으로 확대시행
 -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
 -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이윤 제한
 -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 개발이익환수 강화
- 이행 기간
 - 토지세 기본소득
 - 「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, 2023년부터 토지세 기본소득 시행
 - 토지임대부 개발
 -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0만 호 이상 토지임대부 주택공급
 - 공공이 개발하는 분양상가/산업단지의 경우 전면 토지임대부 개발방식 도입
 - 토지주택은행 설립
 - 「토지주택은행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
 - 적극적인 토지비축·판매 등의 역할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
 - 주거복지 강화

- 2032년 공공임대주택 15% 달성 목표(연간 20만 호 공공임대주택공급)
 - 최저주거기준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
-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
 - 「도시개발법」,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 정비후 시행
- 재원조달방안 등
 - 토지세 기본소득 :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, 모든 민간보유 토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인 0.8%~1.5%, 법인 0.5%~1.3%의 3단계 누진세율로 토지세 부과, 재산세 토지분은 차감
 - 2023년 37.5조 원에서, 2026년 44.2조 원의 토지세 세수 확보
 - 토지임대부 개발-토지주택은행 : 연간 2조 원의 토지주택은행 재원 조성, 정부와 국민연금과 도시주택기금, 일반 국민들의 투자 참여 및 임대수익 배당
 - 주거복지강화 : 토지주택은행과 연계하여 사업시행, 연간 30조 원(22' 정부 예산 대비 1.5배 증가)

공약순위 3 :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

- 목표
 - 성범죄-여성폭력 근절
 -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
 - 노동시장 성별 불평등 해소 및 모두돌봄사회 구축
 -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
 - 온라인 혐오 표현 없는 사회
- 이행 방법
 - 성범죄·여성폭력 근절
 -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, 불법촬영물 선제적 삭제 및 지원 예산 확대
 - 스토킹,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
 -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에 권력형 성범죄 명시, 업무상 위계 성폭력 적용 범위 확대
 - 국방부 산하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 등 조치로 군대 내 성폭력 근절
 - 피해자 중심 사건 처리지침 마련

-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
 - 임신중지 의료 급여화 및 건강보험 전면 적용
 - 공공산후조리원 확대, 임신·출산 부문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
 - 모든 여성 국민 대상 무상 월경용품 지급
 -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
 - 포괄적 성교육 도입
- 성평등 노동과 돌봄
 - 「성별임금평등법」 제정으로 성별임금공시, 채용성차별, 성별임금격차 해소
 - 기본소득과 주3일 휴식제 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등한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
 - 전국민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
 - 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유급화 시행
-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
 -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
 - 민법,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
 - 생활동반자법 도입 및 동성결혼 법제화
 - 1인 가구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
-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
 -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을 통해 혐오 표현 직접 규율
 - 「혐오표현 대응법」 제정 및 (시민사회 자율규약으로서)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 제정
- 이행기간
 -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무상 월경용품, 가족돌봄휴가, 전국민 육아 급여
 -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편성

공약순위 4 :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

- 목표
 - 정치적 대표성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
 -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, 정치 약자 보호적인 공직선거법 개정
- 이행 방법
 - 평등한 정치참여의 전제조건, 민주주의 기본소득 시행
 - 모든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정치인,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 원의 정치 기본소득을 소멸성 디지털 화폐(CBDC) 방식으로 지급
 - 공직선거가 있는 시기 공직선거 당 1만 원 추가 지급
 - 후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본소득 후원금액의 30%를 민주주의 참여소득으로 지급
 - 국회의원 및 지방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
 - 국회의원: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
 -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각 253석으로 하여 총의석수 506석으로 함
 -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정당에 대한 비례의석 배정을 1/의석수%로 함
 - 의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하되 세비, 보좌진 등의 각종 특권과 특혜를 줄여 관련 예산이 늘어지지 않도록 함
 - 지방의회: 광역의회 전면비례대표제로 하고,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 3~4인 중심으로 뽑는 중대선거제 중심으로 개편
 - 대통령-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
 - 정당정치의 다양성 보장
 - 선거 시기에만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단일정당으로 후보를 내세워 경쟁하는 선거연합정당 허용
 - 정당설립요건 규정 폐지, 지역당 허용
 -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언론 접근 보장
 -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정치 표현의 자유 확대
 - 「공직선거법」 상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'에 대한 규제 완화
 - 선거에서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
 -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 설치
 - 평등한 참정권 보장

- 공직선거일의 유급휴일화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
- 장애인 투표 접근권 보장
 -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
 - 투표소 접근권 독소조항 폐지, 장애인 접근권이 가능한 투표소설치 의무화
 - 시각·청각장애인의 투표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
- 교사/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
 - 정당가입및정치적발언의자유확대
- 청소년 참정권 확대
 -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당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폐지
 - 교육제도 상 ‘모의투표’허용 및 시행을 위한 교육지침 개정
- 정치권 내부 성별 불균형 개선
- 이행기간
 -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 -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안 적용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-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

공약순위 5 :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 중립 달성

- 목표
 -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과 공유지분형 그린뉴딜, 녹색금융 시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
- 이행 방법
 -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
 - 화석 에너지 전체에 대해 탄소세 도입과 세수의 기본소득 배당
 - 2030년 탄소배출량 50% 감축을 목표, 화석 에너지 전체에 대해 1이산화탄소 상당량톤당 2023년 6만원, 2026년 9만원의 탄소세 부과
 -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을 방지하고,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세율 부과를 위해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

- 기본소득 그린뉴딜
 - 「디지털·녹색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」 제정
 - 그린뉴딜기금의 목적을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사회 전환과 그 혜택의 국민 환원으로 규정
 - 기금 수익의 국민 배당 원칙을 규정함
 - 500조원 규모 그린뉴딜기금 설치
 -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각각 500조 원의 기금마련을 통해 그린 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 진행
 - 그린뉴딜기금의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녹색 산업과 기술 전체
- 녹색금융 및 녹색 양적완화 시행
 - 은행의 기업 대출에 기업의 탄소중립 기여도 반영,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재무 정보 의무보고제 시행 등 녹색금융 도입
 - 50조원 규모 녹색 양적완화 시행
 - 한국은행법 제75조를 활용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녹색 국채를 직접 매입
 - 정부가 녹색 국채로 조달한 자금은 그린뉴딜기금 재원으로 활용
- 탈석탄-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
 - 2030년 탈석탄 시행, LNG화력발전 대체없는 재생에너지 30% 달성
 - 수송부문 탄소배출제로 로드맵, 내연기관자동차 감축 및 전기차 비중 확대
 -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확대로 전국적 전력 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
 - 핵발전의 조속한 폐기
 - 우라늄발전원에대한세제감면혜택폐기,핵발전위험부담금산정
 - 핵발전 위험부담금은 핵발전소 중단 비용 및 가동 중 핵발전소의 내진 및 안전설계 확보에 사용
- 이행 기간
 - 기본소득 그린뉴딜기금
 -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린뉴딜기금 500조 원 마련
 - 2027년부터 조성된 기금 중 차입금 상환 및 전국민 배당 시작
 - 녹색금융 및 녹색양적완화

-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0조 원 규모 녹색 자산 매입 시행
- 탈석탄-에너지 전환 로드맵
 -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기본소득형 디지털·그린뉴딜 기금
 - 한국투자공사(KIC) 운용자산 뉴딜기금으로 편입
 - 국민연기금으로부터 차용하고 초기 자금 마련 후 순차적 상환
 - 녹색 국채 발행, 통화제도 개혁을 통해 마련한 정부 재정 자금 투입
 - 녹색금융 및 녹색양적완화
 - 녹색금융은 비재정 공약, 녹색 양적완화는 녹색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
 - 탈석탄-에너지 전환로드맵
 - 그린뉴딜기금 구성에 따른 투자 금액
 - 입법연구-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

공약순위 6 :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

- 목표
 - 소외받는 계층 없는 공공사회서비스의 재강화
- 이행 방법
 - 누구나 디지털, 디지털 기본권 구축
 - 디지털 전환 시기 필수재인 통신 데이터의 전국민 기본 5GB 무료 제공
 - 공공 WI-FI(와이파이) 관리시스템 정비 및 보안성 강화
 - 디지털 정보 케어 시행으로 노인 등 정보접근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시행
 -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화로, 탈시설-사회서비스 통합돌봄사회 구축
 - 탈시설-주거 지원에서 돌봄까지 「통합돌봄법」 제정
 - 돌봄비용 국가부담 원칙 수립
 -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영화
 -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 및 공공 고용인력 확대

-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동반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
 - 아동/청소년 관련 주거복지 강화
 - 「장애인-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주거약자 항목 확대
 -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조를 반영한 「통합돌봄법」 제정과 공적지원주택 확대
 - 현행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- 공공병상 30% 구축, 건강보험 보장성 80% 목표, 누구나 건강보장
 - 공공병상 및 의료 인력체계 개편으로 공공병상 30% 달성
 -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80% 달성
 - 「한국형 통합의료모델 제도」 수립으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
-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
 - 주거급여 상 자기부담금 폐지
 - 의료급여 상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
 - 긴급생활지원제도 예산을 의무지출 예산으로 편성 확대
- 이행기간
 -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-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

공약순위 7 :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 소득 디지털뉴딜

- 목표
 - 디지털 전환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귀속 되도록 함
 - 4차산업혁명 시기 새로운 자원으로 부상한 데이터에 데이터세를 부과해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함
 -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로 혁신 경제와 공정 경제의 기반 조성
- 이행 방법
 - 「디지털-녹색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」 제정

- 디지털뉴딜기금 500조원 조성하여, 디지털 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 진행
- 메타버스, 디지털 트윈, 비대면 기술 인프라, 스마트 단지, 디지털 보안 강화 등 주요 디지털 분야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
- 2027년부터 디지털뉴딜기금 수익 일부를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
-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
 - 데이터에 조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
 -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'디지털세' 합의에 의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
- 플랫폼 공정경제 수립
 -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
 -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'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'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10년 유지
 -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인수합병(M&A)과 불공정행위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입증책임을 스스로 부담함(경쟁제한성 입증책임 전환)
 - 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 온라인 플랫폼 입주업체 보호의무 강화
- 이행 기간
 - 기본소득 디지털뉴딜기금
 -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뉴딜기금 500조 원 마련
 - 2026년까지 투자 수익은 전액 기금으로 재투입
 - 2027년부터 조성된 기금 중 차입금 상환 및 전국민 배당 시작
 -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
 - 법인세 또는 소비세 방식 중 적정 방법을 택하여 2023년부터 데이터세 부과하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
 -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제 수립
 -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기본소득 디지털뉴딜기금

- 한국투자공사(KIC) 운용자산 뉴딜기금으로 편입
- 국민연기금으로 초기자금 차용하고 순차적으로 상환
- 국채 발행과 통화시스템의 주권화폐 전환을 통해, 차용액 상환 및 기금 규모 확장

공약순위 8 :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

- 목표
 - 기본소득과 함께 ‘주3일 휴식제’ 노동시간 단축
 -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
 -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부실화된 사회보험의 재강화
 - 5인 미만 사업장, 현장실습 노동 등 취약 노동권 보호
- 이행 방법
 - ‘주 3일 휴식제’ 시행
 - 주 32시간제 + 연장근로 6시간 제한
 - 주간 표준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, 총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주 12시간에서 주 6시간 이하로 단축
 - 유급휴가 연 30일제 시행
 - 1년근무이후적용되는연15일유급휴가를연30일로연장
 - 매2년마다1일의유급휴가가산제도없이첫해부터연30일고정
 -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
 - 「플랫폼 노동자 권리법」 제정
 -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고,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입증책임을 부담
 -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및 협상권 부여
 -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
 - 배달 플랫폼 안전배달료 도입
 -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 도입
 - 이륜차 표준공임단가 도입, 오토바이 수리센터 자격증 및 등록제 도입

- 현행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1:1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일반 노동자에 준하여 전액 사업자 부담 전환, 전속성 기준 폐지
-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
- 고용보험의 소득보험 전환
 - 현 고용보험 상 제외되어있는 모든 취업자 대상의 소득보험제도 도입
 - 가입대상은모든취업자당연가입으로시행
 -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요건으로 하는 구직급여 지급, 그 외 모든 취업자(특수고용노동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30%의 소득감소를 소득급여 지급 요건으로 함
 - 소득보험 전환과 함께 현행 60% 소득대체율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70%로 인상
 - 소득보험 전환과 함께 소득급여 상한을 최저임금의 1.2배로 정하여 인상
- 취약 노동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
 -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
 - 「근로기준법」 제11조(적용범위) 규정 삭제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 원천 폐지
 - 현장실습제 폐지-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
 - 3학년 2학기 11월까지 기업체의 취업 관련 일체의 현장실습 폐지
 - 3학년 2학기 12월 이후부터 전국 동시 '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준비기간'설정, 시험과 취업활동을 진행, 정식 취업은 졸업 이후 추진
- 이행기간
 -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득보험
 - 고용보험제도 개혁을 통해, 소득보험료 재산정을 통한 소득보험재원 마련
 - 기타 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반예산으로 확보

공약순위 9 :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

- 목표

- 생태적 한계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공존을 위해 생명권과 존엄의 권리를 자연과 동물로 확장
- 이행 방법
 - 자연과 동물의 권리 보장
 - 동물과 자연의 권리, 공존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
 - 정치의 영역과 법정에서 대변될 권리 보장
 - 동물과 자연물도 특정 법적 권리를 소유한 법인임을 인정
 -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
 - 반려동물 중심, 위반시 제재 경미 등 한계를 안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
 - 교육과정에서 동물실험 금지, 생명 윤리 및 생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입
 - 생물다양성, 생태계 보전
 - 국제 수준의 법정 보호지역(육지,해양) 30% 지정
 - 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
 - 대규모 어획, 남획을 금지하는 규제 시행
 - 신공항 건설 철회, 지역 난개발 중단
 - 지역 중심의 생태 참여소득 시행
 - 순환경제시스템 구축
 - 국가단위 순환경제로드맵 수립
 - 폐기물 처리, 재활용 산업 등 순환 중심의 인프라 구축
 - 제품에 대한 순환형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구조 변환
 - 환경기초시설 공용화 및 쓰레기 처리 국가 관리체계 수립
 - 플라스틱 규제 정책 시행
 - 공장식 축산 중단 및 탈육식 로드맵 수립
 - 축산동물 학대 행위에 실효성 있는 감시와 처벌 마련
 - 공장식 축산업 중단 및 점진적 폐지
 - 채식기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시행
 -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및 거래 금지

- 야생동물 보호구역 복원 및 확대
- 야생동물 거래 금지
- 민영 동물 전시 산업 금지, 공영 동물원을 야생동물 쉼터로 전환
- 동물 이용 산업 규제 및 축소
 - 반려동물 거래 원칙적 금지, 입양문화 확산, 반려인 책임 강화
 - 국가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립 및 동물실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운영감독
 - 동물 이용 상품(가죽, 모피, 털) 이용 축소 방안 마련
 - 동물을 이용한 오락·유흥·스포츠 산업 지원 중단 및 축소
- 이행기간
 -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-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

공약순위 10 : 국민을 위한 재정·통화제도 민주화

- 목표
 - 불평등 해소에 우호적인 재정 및 통화제도 개혁
- 이행 방법
 - 기획재정부 조직과 권한의 분리 개편
 -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
 -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
 -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경제정책의 기획, 예산의 편성, 중앙행정 기관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 관장
 - 재무부는예산의집행,국가회계및국고관리업무분담
 - 금융감독위원회,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차단, 실질적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
 - 주권화폐제도 도입
 - 민간은행이 유통 통화량의 대부분을 발행하는 현행 신용화폐 시스템을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

- 주권화폐 도입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화폐발행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함
 - 주권화폐 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 공론화기구를 통해 공론화 진행 후 2024년부터 이행
- 주권화폐 전환에 CBDC 적극적 활용
 - 주권화폐 공론화 과정에 수행될 연구와 실험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(CBDC)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권화폐 발행 형태도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된 CBDC를 적극적으로 검토
- 예산 법률주의 도입
 - 예산에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여 예산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
 - 헌법 제 54조에 규정된 ‘예산안’을 ‘예산법률안’으로 개정하고 법률로 「예산법」 제정
- 이행기간
 - 주권화폐 제도 : 2023년부터 주권화폐공론화위원회 도입 1년여년간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걸쳐 2024년 도입
 - 기타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-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